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12월 10일(통권78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민주노총의 전투적 노동운동, 이제는 끝나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목 차

1. 민주노총의 일탈과 공권력의 허상
2. 전투적 노동운동이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 야기
3. 내부 자정기능 없는 노동조합은 소멸한 것이 선진국 노동운동 역사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민주노총의 행태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의 노동운동을 전투적으로 만들었다. 문제를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법을 어겼다. 민주노총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불법 시위는 물론 비리와 폭력으로 이어졌다. 최근의 민주노총 총파업을 보고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은 탄식한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고용세습비리를 보고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청년들은 분노한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유성기업 임원에 대한 집단폭행은 합리적인 노동계 인사마저도 경악하게 만든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좌파 시민단체 등은 민주노총을 두둔했다.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노총이 탄생한 이후 계속되어왔다. 이러니 민주노총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노총만을 위한 나라라는 자조도 나온다.

반면 군사분야 합의서는 서해 NLL 이남수역에 대해 단독·배타적으로 행사해 오던 영토관할권을 훼손

1. 민주노총의 일탈과 공권력의 허상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게 사과도 요구하지 않았다. 불법 시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거꾸로 불법 시위 막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는 정부가 되었다. 총리나 주무 장관은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말로 업포나 놓았다. 경찰은 괜히 잘못 말려들면 손해보고 끈이곧대로 했다가는 칭찬은커녕 과잉진압으로 처벌받기 십상이다. 민주노총의 불법 행동을 모른 채하거나 방치한다고 경찰에게 탓을 돌리기 곤란해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비리나 유성기업의 폭력 사건은 더 심각한 문제지만 역시 좌파 시민단체는 민주노총을 감싸고 정부는 눈감아주고 있다. 민주노총이 어떻게 전투적 노동운동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노동시장의 대혼란을 야기한 최저임금 1만 원은 민주노총의 요구였다. 소득주도성장도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일등 공신이다. 각 부처의 장관들은 민주노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수용하려고 한다. 반면, 경영계의 결사체인 경총은 적폐로 몰렸고 기업은 숨죽이고 있어야만 했다. 민주노총의 핵심 동지인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 인사들은 정권 창출의 공로로 정부의 핵심 포스트에 앉아있다. 서울시는 한술 더떠왔다. 민주노총과 손잡고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한 서울시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비리를 묵인했다. 정부와 서울시까지 민주노총의 비위를 맞추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마당에 민주노총이 전투적 노동운동을 바꾸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막강한 민주노총도 시대 변화를 외면

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1987년 민주화운동 덕분에 탄생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전투적 노동운동을 고수했지만 노동운동의 환경은 전면적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은 존립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을 무조건 지지하는 정부와 정당도 마찬가지로 신세다. 이것은 세계의 노동운동의 역사가 말해준다. 기술혁신과 세계화에 의한 경제 질서 변화는 과거 어떤 때보다 빠르다. 노동운동으로 거대한 변화를 막을 수 없고 노동조합의 힘으로 고용과 소득을 안정시키기조차 어렵다. 전투적 노동운동은 오히려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국마다 전투적 노동운동이 퇴조했고 경영계는 물론 정부와 협력을 추구하는 합리적 노동운동이 대세가 되었다.

2. 전투적 노동운동이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 야기

한국의 노동시계는 거꾸로 갔다. 유독 한국만 전투적 노동운동이 활개 치면서 고용은 악화되고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비해 조합원 수가 작지만 대기업에 조직이 집중되어 소속 노동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에 비해 5배나 많다. 민주노총의 투쟁 덕분에 대기업정규직은 임금이 급속히 올라갔고 고용보호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반의 반 토막 나고 10% 정도로 내려앉으면서 중산층은 실종되었다. 고용의 90%가 중소기업에 몰리고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30인 이하 영세기업이 차지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임금차이가 커져 한국은 세계에서 기업규모 간 격차가 가장 큰 국가가 되었다. 게다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노동이동성이 단절되어 10:90의 신분사회가 되

었다. 이러면서 청년이나 여성 등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막힌 아웃사이더가 되었다.

민간부문 노동시장이 붕괴의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동력을 공공부문에 쏟고 있다. 공공부문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67%로 민간보다 6배 높고 300인 이상 대기업보다도 높다. 반면, 소규모 중소기업인 30~99인(3.5%)과 30인 미만(0.2%)은 노동조합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입률이 낮다. 한국의 공공부문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다 노동조합 보호 덕분에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급여수준이 높다. 반면, 중소기업은 노동력이 공공부문으로 쏠려 인력난에 시달리고 생존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로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응했다. 다른 나라보다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낮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공공부문 특혜가 다른 나라보다 많다는 점은 감춘다. 전투적 노동운동이 야기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균형이 한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있다.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시장 불균형뿐 아니라 노사관계와 노정관계의 불균형도 일으켰다. 민주노총 탄생 이후 기업의 작업현장은 노동조합의 지배하에 놓였고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현장에서도 힘의 균형이 깨졌다. 전투적 노동운동은 정책무대를 노동계에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정당은 노동계에 손을 벌리고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이런 사이 국회와 내각에는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정치인이 즐비해졌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노동계의 정책참여를 제도화했지만 민주노총은 외면했다.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압력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들러리서는 위치로 전략했다. 노동자가 아닌

노동계중심의 노동정치는 기울어진 정책무대를 만들었고 아웃사이더문제를 악화시켰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재벌옹호나 반개혁으로 몰렸다.

편향된 노동정치와 정책무대는 규제 강화와 일자리창출 저하를 야기했다. 규제가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자본과 일자리가 해외로 대거 유출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 대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비율은 80년대 0.7배, 90년대 0.9배에서 역전되어 2000년대 1.9배, 2011~17년 2.9배로 커졌다. 2005년 이전까지는 해외직접투자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았지만 거꾸로 되어 2007년 차이가 3배로 급등했고 그 이후 이런 비율이 유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투적 노동운동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면서 규제 강화가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다. 놀랍게도 자본과 일자리의 해외유출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커졌다. 2017년 자본유출과 일자리 해외유출은 각각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4배와 5배 많다. OECD에 의하면 한국은 규제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4배 많고 생산물시장 규제개혁의 효과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3. 내부 자정기능 없는 노동조합은 소멸한 것이 선진국 노동운동 역사

노동운동은 소외와 차별을 막고 포용과 연대를 추구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철학을 상실하고 전투성에 몰입한 나머지 정반대의 결과에 봉착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 때문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이 희생되었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정부와 대립하면서 노동자의 이익은 지속가능하기 어려워지고 노동자 사이의 이익이 조화할 수 없어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실패했다. 국민이 민주노총에 등을 돌렸지만 촛불혁명의 동지인 문재인정부의 탄생으로 민주노총은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적이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면서 거리를 두었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온다. 경제기술 환경 변화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냐 민주노총이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노동운동은 산업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책임원리에 충실한지 반성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든 내부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누군가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면 사과하고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되도록 민주노총은 민주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조합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내부 자정 기능이 없는 노동조합은 소멸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노동운동 역사가 보여준다. 전투적 노동운동 대신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찾아야 한다.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저소득은 숙련과 네트워크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 노동조합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약자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이익을 키워야 한다. 이것은 선진국 노동운동의 변화 방향이다.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기업과 노동조합 그리고 정부와 노동계는 협력과 갈등의 관계에 놓여있다.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라면 기업과 정부는 노동운동이 새로운 노선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봤듯이 현명한 기업과 노동조합은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고임금 고생산성 체제를 확립했다. 현

명한 정부와 노동계는 노동운동이 성숙해지도록 만듦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했다. 정부는 일부 힘 있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운동을 좌지우지하거나 일부 노동조합의 비리와 부패가 노동운동의 판을 해치지 않도록 견제했다. 노동운동은 스스로 도덕성을 상실한 노동조합이 조직에서 퇴출되도록 내부 윤리를 강화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동조직을 통합해왔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